정치권 '개헌론' 다시 급부상

김형오 의장 공론화… 미래헌법硏 "정비 필요"

여야 모두 공감 9월 개헌특위 구성될 가능성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으면서 '개헌론'이 정치권에서 급부상하고 있다.

현행 대통령제 아래에서는 대통령으로의 과도한 권력 집중과 정권 중반 이후의 레임덕 현상, 전(前) 정권에 대한 가혹한 심판 등으로 사회의 갈등을 유발하는 폐해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단, 정치권의 개헌론자들은 개헌 작업이 내년 6월의 지방선거 이전까지 완료되지 못할 경우 결국 과거처럼 대선, 총선 등과 맞물리면서 개헌론이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개헌논의를 시급하게 착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조기 개헌론은 정권에 부담이 되는데다 여야 정당과 대권 후보군들의 여러 셈법이 엇갈리면서 구체적인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런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은 11일 롯데호텔에서 열린 인간개발 경영자 연구회 주최 특강에서 "제헌절이 한달 남았는데 이때부터 헌법개정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겠다"며 개헌론을 공론화했다.

김 의장은 "1987년 헌정 체제를 지금까지 20여년간 유지하고 있는데 직선제 이후 대통령 5명 가운데 4명이 불행한 결과를 맞았다"면서 "이러한 부작용이 지금 엄청난 시련으로 느껴지는 만큼 개헌을 통해 국가시스템을 재정비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또 여야 인사들이 두루 참여하는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 이주영(한나라당) 공동대표도 YTN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지금의 헌법은 시대에 맞지 않은 여러 내용들이 있는 만큼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개헌론은 국회의장실과 여야 의원 186명이 참여하는 미래한국헌법연구회가 주도하고 있으며 대체로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개헌특위를 구성, 지방선거 이전에 개헌을 마무리 짓는다는 구상이다.

특히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자문연구위원회는 분과별 토론회와 해외시찰 등을 통해 개헌안 마련에 총력을 쏟고 있으며, 제헌절 이전에 구체적인 안을 마련해 9월 구성되는 개헌특위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도 개헌 문제에 관한한 공감대를 이뤄가고 있다.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지난 9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이 되면 모든 것을 얻고 지면 모두 잃는 구조"라며 "권력을 분산시켜 지더라도 다른 기회가 있고 또 권력을 나누니까 괜찮은 구조로 가야 한다"며 프랑스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대안으로 내세웠다.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도 "안 원내대표가 개헌 논의를 경제위기가 극복되고 나면 한다고 했는데 이명박 정부 임기 중에 경제위기를 다 극복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할 거면 이번 제헌절을 계기로 개헌 논의의 서장이 열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왼쪽〉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9주년 기념 정책토론회'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원내 복귀' 고민되네

원칙론 "5대 요구사항 받아내야"

협상론 "국회 개회 늦추면 역풍"

거리로 나섰던 민주당이 국회 복귀 문제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일단 민주당 내부는 '원칙론'과 '협상론'으로 양분된 상황이다. 원칙론은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6.10 범국민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른 기세를 살려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로 요약되는 5대 요구사항을 모두 받아내자는 주장이다.

이를 반영하듯, 송영길 최고위원은 11일 MBC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현재 상황으로는 국회가 정상화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요구 사항을 정부와 한나라당이 즉각 수용할 태세를 보이는 것이 국정을 정상화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즉,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책임자 문책, 국정조사, 특검 실시 등 5대 요구사항의 일부를 여권에서 수용하지 않는다면 6월 임시국회 개회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당내 강경파 일각에서는 여권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한나라당과의 6월 임시국회 개회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선 이 대통령의 사과 등 5대 요구 수용을 고집하면서 국회 개회를 늦출 경우 오히려 역풍이 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또, 현실적으로 이 대통령의 사과는 받아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오히려 국회에서 이를 이슈화하는 한편 특별검사 도입과 국정조사, 국회 내 검찰개혁특위 설치 등의 요구를 실현시키는 편이 낫다는 것.

박지원 의원도 "야당의 가장 강력한 투쟁 장소는 국회"라며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선 민주당이 국회에서 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정부개편을 요구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협상론자들도 국회 개회시점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일단 원내 협상을 진행하면서도 시민단체와의 장외연대를 통해 협상력을 극대화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반면 전격적으로 6월 임시국회 참여를 선언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김효석 의원은 "6월 임시국회 개회를 외면한다면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전격적으로 6월 임시국회 개회를 선언하고 현 정권의 문제점을 국회에서 철저하게 파헤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

정가 라운지

광주시의회 '무등산 조례' 처리 또 연기

○…관광자원 개발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무등산 자연경관 보호 및 관광자원 활용에 관한 조례안'(무등산 조례) 처리가 또 다시 미뤄지게 됐다.

광주시의회 강박원 의장은 11일 "무등산 조례를 발의한 이철원·송재선 의원과 이를 반대하는 환경단체 간 대화를 통한 절충점을 찾기 위해 이번 회기에는 안건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의장은 지난 10일 양측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이날 양측 입장을 다시 들은 뒤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제179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방침이던 '무등산 조례'는 강 의장이 직권상정 않기로 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됐다. 현재 무등산 조례는 지난 3월 제177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다.

강 의장은 이와 함께 양측에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조례 폐기'가 아닌 '환경단체 참여, 조례 전면 수정안'을 양측에 중재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재)광주비엔날레 등 광주시가 출자·출연한 15개 기관에 대해 정기 경영평가가 실시된다.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1일 손재홍 의원(광주 동구2)이 발의한 '광주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조례안'을 원안 의결, 본회의에 넘겼다.

조례안은 시가 자본금 또는 재산 4분의 1 이상 출자·출연한 15개 기관에 대해 2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경영평가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증감이나 조직 조정 등 권고할 수 있고 기관장에 대한 연봉 조정이나 인사 조치도 가능토록 했다. 평가 결과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경영평가 대상은 광역정보센터, 한국CES, 수완에너지 등 출자기관 3곳과 광주발전연구원, 남도학숙, 광주비엔날레, 광주디자인센터, 광주테크노파크, 광주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문화예술진흥위원회, 5·18 기념재단, 광주영어방송, 빛고을노인복지재단 등 출연기관 12곳 등 모두 15개 기관이다.

민자도로 재정 보전 정부에 건의

○…광주시의회가 '혈세 잡아먹는 하마'로 전락한 제2순환도로 민자구간에 대한 재정 보전 등을 청와대와 중앙정부, 국회 등에 건의키로 했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자도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본회의에 상정했다.

산건위는 구체적으로 ▲민간사업자의 수입보장조건 완화나 관리운영권 매입 협의 추진 및 관련법 개정 ▲공익처분을 위한 손실보전금 등 행·재정적 지원 ▲재정보전금 등에 대한 국가 예산 지원 등을 청와대, 중앙정부, 국회, 각 정당 원내대표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쇄신 내홍·책임당원 급감 한나라 '내우외환' 주름살

한나라당이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후폭풍으로 당내에서는 쇄신 논란이 내홍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지지율 추락 및 책임 당원까지 급감하는 등 악재가 겹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쇄신 논란으로 불거진 당내 내분 사태는 극적인 화합책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쇄신 논란이 잦아들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시한폭탄과 마찬가지"라며 "뚜렷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민만 깊어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책임 당원도 확고한 민심 수습책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의 주름살이 깊어가고 있다. 현재 월 2천원씩의 당비를 내는 한나라당의 책임 당원은 15만명 가량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08년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의 30만명에 비해 무려 절반 이상 줄어든 수치다.

이는 당시 과다하게 모집했던 '반짝당원'들이 빠져나간 데다 '010 번호통합' 제도가 도입되면서 휴대전화로 당비를 납부하던 책임당원 가운데 상당수가 이탈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기에 계속되는 경제난과 국정 불안 등에 따라 여권에 대한 지지율이 급감한 것이 보다 책임당원 감소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실제로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 지지도는 4년 만에 민주당에 역전당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깨끗한 정치인에 못할 짓 해"

박연차, 이광재 의원에 사과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11일 자신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이광재 의원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깨끗하게 정치를 하려는 사람한테 못할 짓을 했다. 고개 숙여 사과한다"며 공개 사과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 전 회장은 "평소 이 의원이 젊은 정치인으로 훌륭하다고 생각해 여태까지 10억원이 넘는 돈을 지원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며 "이번 일은 스스로 생각해도 이해가 잘 안간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박 전 회장에게 직접 "2002년 2억원, 2003년 2억원, 2004년 1억8천~2억8천만원 등 수차례 자금을 주려고 했고 그때마다 '필요하면 말씀드리겠다'며 거절하거나 돌려보낸 일을 기억하느냐"고 물었고 박 전 회장이 모두 기억한다고 답하자 "저한테 이러시면 정말 죄짓는 겁니다"라며 다소 격앙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연합뉴스